

광산시민수당, 일자리 패러다임 바꾼다

2020년 전국 최초 도입 시행

조례 만들고 수당위원회 출범

사회활동 시민에 '참여 소득'

고용에서 참여로...일자리 새모델

전국 최초로 참여소득 일자리를 시도한 광산구의 정책 실험이 제도 정착의 단계로 자리잡고 있다. 시민의 가치 있는 사회활동 참여가 '일자리'가 되는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시민수당의 체계적인 기반을 확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광산시민수당위원회가 지난달 말 위촉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광산시민수당위원회는 '광주시 광산구 광산시민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참여소득,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광산구의회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 협력을 토대로 광산시민수당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참여소득 일자리로 안착·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와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광산시민수당은 사회가치 실현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참여소득'을 도입한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일자리 모델이다. 무조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도 다르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과도 성격이 다르다. 시민의 사회활동 참여를 '노동'으로 보는, 즉 일자리의 개념을 '고용'에서 '참여'로 확장한 새로운 접근인 셈이다.

경력과 자격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 변화로 새롭게 생겨난 사회서비스 수요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경력 단절, 실직 등 '일자리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광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광산시민수당을 최초로 도입, 지난해까지 총 31개 사업을 통해 1040여 명의 활동을 지원했다.

첫해 마스크 제작, 방역 등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분야와 침체된 문화예술 분야가 중심이 됐다. 지난해에는 돌봄, 기후위기 대응, 마을기록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능력, 기술을 가진 시민에게 활동 기회를 주고, 여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가 나타났으나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외 다른 계층,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지 못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었다.

광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 광산시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광산시민수당 적용 대상을 전 연령·



최근 광산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광산시민수당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한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계층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참여소득 일자리 모델의 정립을 위한 제도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광산시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점진적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광산이 개척한 참여소득 일자리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지역 대표 관광상품 제작 지원사업

오늘 온라인 사업설명회

지원금 1400만원까지 신청 가능

광주시는 "관광객의 지역 관광상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의 특색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관광상품의 발굴 및 제작을 위해 지역 대표 관광 상품(굿즈)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광주 대표 관광디자인 제품(굿즈) 개발 지원'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운영은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이 맡는다.

지원대상은 지역 문화자원 등을 모티브로 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소비자가격 3만원 이하(세트 상품 구성 시 합계 기준), 우수한 품질과 양산 가능한 공산품 형태의 관광상품이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이전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해 신고된 광주시 소재 디자인 전문기업이며, 총사업비의 20% 자부담금 매칭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100만원 상당의 양산 결과물(최소 30개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관광상품(굿즈)의 창의성, 우수성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사업추진역량,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8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최대 14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상품 양산비, 패키지 제작비 등 직접적으로 상품 양산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24일 오후 2시 지역 디자인 전문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 접수는 4월20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이며, 전국 5개 디자인진흥원에서 공동 구축한 지역 디자인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신청 받는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광주시와 (재)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지역 디자인 통합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전략산업팀(062-611-5034)으로 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구, 구직 청년 AI 면접 훈련 프로그램 운영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20명 모집

광주 광산구는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면접 역량을 기를 수 있는 'AI(인공지능) 면접 합격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산구 청년플랫폼의 청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청고래(청년과 함께 고민하는 래(내)일)'의 일환이다.

4차 산업시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면접 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에게 AI면접 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성공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했다.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광산구에서 활동하는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20명을 모집해(선착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공간 제약 없이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첫 프로그램 참여자는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 링크(forms.gle/AzAejTnc9Z7QZSvA8)나 웹자보 QR코드에 접속한 뒤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참여자에 대해선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2주 이내 AI 면접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광산구는 직군, 직무 적합도, 주요 강·약점 등 면접 결과 분석지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일자리정책과 청년활력팀(062-960-3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이영훈 의장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별위원 위촉

"수도권 집중화 바로잡겠다"

이영훈 광산구의회 의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포함해 국가균형발전 계획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영훈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지역 여론 수렴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특별 기구인 국민소통특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의장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들을 광산구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변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훈 광산구의회 의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특히 광산구민의 대의기관인 광산구의회 의장으로 대표성을 갖고 지역단체·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장은 또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발전 전략 수립,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정책들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지역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투자 촉진법 제정 등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겠다"며 "특히 수도권 집중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더 과감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제시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지역공동체, 우크라이나 성금 1억원 전달



광주 광산구 지역공동체는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며 모은 성금 1억 원이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됐다. 앞서 광산구 80여 기관 단체도 전쟁으로 큰 고통을 입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1억 원의 성금을 모아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에 전했다.

손해보험협회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